

공무원연금 개악, 교육복지 예산 삭감...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 · 서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 관련 기사 2, 3, 4 면



민주노총 선거

후보별 공약 검토

8, 9, 10 면

투쟁을 강조하는

한상균 후보

16면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12~13 면

다시 추락 위험

제기되는

세계경제

5 면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 민영화 공격

10 면

남아공

코사투의

금속노조

제명 후폭풍

6 면

인종차별은

피부색만의

문제가 아니다

11 면

시리아 혁명가의

아버지가 전하는

감동적인 말

7 면

누구의 말일까요?

슈피겔: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미래를 결정할 자유가 당신들에겐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헨리 키신저: 왜 안 되는가?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단순히 숫자로만 대표를 뽑는다면 월급여가 1천8백 달러(약 1백90만 원)에 못 미치는 홍콩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 대표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홍콩 행정장관 령춘잉이 밝힌,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

“밤에 훌쩍데기 이불 세 장을 덮고 잔다. 연기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벽돌 침대를 덮힐 수가 없다.”
베이징 외곽 마을의 한 주민.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때 스모그를 차단하려고 중국 정부가 주민들이 석탄과 나무 갈감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

“이제 됐다. 난 지쳤다.”
멕시코 검찰총장 헤수스 무리요 카람이 실종 대학생 43명 피살사건에 대해, 세월호 참사가 떠오른다.

“국회의원이 국가 지도자급인데 일당 받는 노동자로 발상한 것은 잘못됐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혁신안’이 언짢은 홍준표, 일당 주기도 아깝다

“프로젝트를 하다 실패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한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그런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최경환, 복지할 돈은 없다더니?

질문: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모범 답변: “농담으로 받아 칠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커피나 복사 등 잔심부름은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범 답변: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웹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여성 지원자 연란 질문과 모범 답변

“학생들을 성적으로 쫄 세우기도 모자라서 가난을 기준으로 쫄 세우기 하려는 것이냐”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경남지사 홍준표가 의무(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일침

“우리는 가족 잃은 부모고, 사람이니까, 짐승이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안산 단원고 고 최성호 학생 아버지 최경덕 씨, 정부의 세월호 참사 범대본 해체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하라면 정말 파업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을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쌍용차 해고 노동자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는 10월 말에 국회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새누리당은 의원 1백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악안에는 없었던

조처도 추가됐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정부부담률도 낮췄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박근혜는 11월 20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아 냈다. 특히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를 만든다더니 삼성인사팀 출신 이근면을 처장으로 임명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근면은 공적연금 개악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삼성생명 등 민간보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근면은 임명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

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이한구는 “자꾸 저항을 하면 나중에 [연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퇴직 연령을 무려 7년이나 늦춰 계산한 공무원 생애임금이 ‘민간기업 노동자보다 1억 원 더 많다’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이간시키고 있다.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12만 명이 보여 준 투쟁 열기를 총력 파업으로 이어가자.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을 뿐 개악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1백 퍼센트 동의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춰서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개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좋겠다” 하고 텃 불었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불과 서너달 뒤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 못할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새정치연합이 공투본 대표자들을 만나 작성한 합의문에도 시기는 언급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과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

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빅딜’ 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초 기초연금 사기극의 공범짓을 했다. 최근에는 의료, 교육 등 공공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새누리당과 야합해 국회에 상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 바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좌절됐지만 말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 개악이 현실화되긴 어렵다고 본다”(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관측은 우리 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 지도부 등이 새정치연합만 믿고 투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는 단지 시점 문제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각별히 사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지간한 투쟁으로는 개악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12만 명이 보여 준 투쟁 열기를 계속 끌어올려 총력 파업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안이한 관측으로 투쟁 시점을 미루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투지를 삭히는 절차일 수도 있다. 노조 지도자들이 조합원들을 실전에 대비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연히 시간을 끌고 김을 빼다가 결국 결정적 시점에 ‘동력이 없다’며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투사들은 노동조합 운동에서 거듭 본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의 ‘내용’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연금개혁에 동참” 하겠다고 공투본 지도자들이 선언한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문맥상 “합리적”이라는 말도 모호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 투쟁을 실제로 하기도 전에 “개악”의 폭을 놓고 협상한다면, 스스로 손발을 묶고 경기장에 걸어들어가는 꼴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투사들은 지도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층에서 투쟁의 압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간질에 기꺼이 응해 준 것이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노조 관료들이 노조 기구 보존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공노총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고, 공노총 제명으로 끝나는 일도 아닐 것이다. 전처럼,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교총까지 끌어들이려 한다.
이는 공투본이 상대적 우파 노조까지 포함된 광범한 연합체라는 강점에서 비롯하는 약점이다. 정부가 최악의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한 노조들이 연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합이 제 효과를 내려면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을 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투본이 더 폭넓은 지지를 받겠다며 ‘공적연금 개악 저지’보다 ‘공적연금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길이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막연한 구호는 서로 다른 뜻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파적 노조 지도자들은 합의된 기치의 모호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삭감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장호중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각종 양보론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토론해야 한다. 우선, 모든 논의가 지도부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지난해 전교조가 정부의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하도록 좌파가 현장 조합원들과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하며 운동을 건설한 것이 지도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한 것은 이후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는 데 도움이 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였다가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활동가들 사이에 사기 저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좌파가 이 어리석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 지금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 좌파는 좌파답게 투쟁적으로 기층의 활동을 강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최근 노동자연대 공무원 회원들의 발의로 수도권 좌파 조합원 18명이 제안한 수도권 지역 현장토론회 '조건 없

는 공무원연금 지키기 —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열렸다. 왜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토론회로 지역을 제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결정 같지는 않다.

이날 토론회는 삭감 없는 공무원연금 지키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지난 7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부의 공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설지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공무원노조 좌파 활동가들은 이런 논의들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동시에, 11월 1일 총궐기의 분노를 모아, 본부별 총력파업 결의대회, 대국민 선전전 등을 촉구해야 한다.

최호준



11월 14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토론회. 이런 기층의 논의와 활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언론에 나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유시민은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정의당 당원으로 노회찬·진중권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고, 이는 '정계은퇴'가 아니다.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큰 틀에서 이 방향은 맞다. 누가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유감스럽게도 정의당도 공무원연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얼마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적자가 계속 누적돼도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가? 지금도 공무원 임금이 박봉인가? 정의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시민은 정부의 개악 방식만 문제 삼는다. “소수의 공무원과 다수의 국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민을 딱 이간시켜 놓고 군사작전 하듯 고립시켜 놓고 밀고 나가는” 방식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악의 방향을 지지하면서 수단만 문제 삼는 것은 원치 않는 반대가 아니다. 복지부 장관 시절 유시민은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한 최악의 개악을 밀어붙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공무원연금도 삭감하라고 당시 행자부 장관 박명재와 목청

을 높여가며 싸운 바 있다.

당시 유시민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걸림돌 취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배신자의 기회주의적인 요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

장호준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새정치연합은 경실련 자문을 지낸 김진수 연세대 교수안을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김진수 교수안은 상한선을 두고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고위 공무원들의 특혜를 제한하고 있다. 하한선도 뒤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인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 받을 연금 액수로 보면, 김진수 교수의 '개혁'안은 새누리당보다 삭감폭이 더 큰 개악안이다. 그는 새누리당 개악안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얼마 안 된다고 비판할 정도로 시장 지향적이다.

김진수 교수는 모든 공무원 노동자의 연금을 15퍼센트씩 삭감하고 심지어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까지 똑같이 깎자고 제안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당장 60세로, 이후 65세로 늦추자고 한다. 신규 공무원은 연금이 40퍼센트나 삭감된다.

'파격적인' 삭감에 비해 하한선 1백50만 원의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10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된다. 연금이 가장 적은 기능직도 평균 월 수령액이 하한선보다 높은 1백59만 원이다. 몇 년 뒤면 임금이 인상돼 그조차 대폭 줄 것이다.

이처럼 최하층 일부에게 생색을 내며 전체 복지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전 세계 주요 정부들이 써 온 수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논리

문제는 진보진영 내에 이런 양보론을 수용하는 입장이 많다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애환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논리를 절반쯤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김진수 교수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진수 교수안을 “긍정적인” 안이라고 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노동자연대 공무원모임 등 기층 활동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연금을 조금 더 받는 노동자들이 정부에 양보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쉽사리 나아가게 된다. 고위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는 것은 공

평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정 절감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진수 교수안을 지지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급여 삭감이 최소화하고, 중위 공무원부터 누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모색하자.”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총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은 김진수 교수 안보다 좀 덜 삭감하자고 제안한다. 재정 위기론도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공무원(평균적인 공무원을 말함) — 장호종 기자 연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마저 대폭 축소된다면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향상을 요구할 근거를 잃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일부는 양보해야 한다. “기득권층(현재 연금수령자, 고소득공무원)의 적극적인 양보를 통하여 취약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양보한다고 해서 박근혜가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을 내세워 정부 안보다 더 나쁜 개악안을 들고 나왔듯이 이런 태도는 저들의 기를 살려줄 뿐이다.

노동자들이 양보한다고 해서 '국민적 지지'가 늘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려 할 뿐 아니라, 자기 공약인 보육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조차 전액 미편성하고 담뱃세 등 간접세를 대폭 인상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재정 절감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재정 적자는 복지 지출이 아니라 경제 불황과 부자 감세 때문이다. 혹은, 미군 기지를 짓고 유지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데 쏟아붓는 수십조 원을 복지로 돌려도 되는데 말이다.

따라서 양보가 아니라 단호한 투쟁으로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장호준

추천 소책자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공무원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의 쟁점과 투쟁의 과제
박천석, 최미진, 장호종 지음, 노동자연대, 94쪽, 3,5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학생 밥상까지 빼앗겼다는 박근혜 정부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박근혜의 교육복지 공약도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예산은 한 톨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조 원 이상 삭감하고 누리과정(무상보육)과 초등돌봄에 필요한 재정 부담(각각 4조 원, 6천6백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중앙 정부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교육청들이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인 누리교육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한다.

정부는 교육청이 빚을 내서라도(지방채 발행) 누리과정을 편성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13년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13조 원이 넘는다. 채무 상환 지출에 쓰는 돈도 9천5백3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가뜩이나 악화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와 우파들은 비열하게도 교육재정 위기를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알량한 복지마저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부금과 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이들 교육청은 급전을 빌리거나 정기에금을 깨면서 버티고 있다.”(〈경향신문〉)

정부와 우파들은 비열하게도 교육재정 위기를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아이들의 밥상까지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알량한 복지마저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초등돌봄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필요하다 기업·부자 과세만 제대로 해도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의료도 가능하다.

부자 증세를 통해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국가재정이 채무로 파탄 지경인데, 진보좌파 진영은 무상파티를 계속하자는 것이냐” 하고 말했다. 홍준표는 재정적자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지배자들의 의중을 정확히 대변했다.

그러나 재정 위기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주들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에게 수 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에 수 십조 원을 낭비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이 넘고 부자들이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돈만 무려 9백조 원에 이른다.

기업과 부자들에게 깎아 준 세금을 원상 회복하고 사내유보금과 해외도피자금에 제대로 과세만 해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물론 무상의료까지도 당장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에 혈안이 돼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3백76조 원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창조경제에 8조 원

넘게 투입하고, 방위력 개선 비용으로 1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예산 규모가 늘면서 내년 재정적자는 3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근혜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복지 예산은 삭감해도, 부자와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 십조 원의 재정적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에게 “기업주를 위해 쓰는 돈은 투자이고, 노동자·서민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다!

노동자들은 재정 위기에 책임이 없다

교육재정 삭감은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의 일부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은 ‘통상임금 축소, 임금체계개편, 노동유연화’ 등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의 서막이다.

우파들은 공무원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이간질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사람

들의 삶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서민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책임은 위기를 불러온 정부와 부자들이 져야 한다.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재정 확충과 임금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전교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박근혜의 내뱉 강요에 맞서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단결해 저항하자.

진보 교육감들의 위태위태한 동요

애초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그런데 보수 교육감들이 먼저 정부 압력에 흔들렸고 곧이어 다수 진보 교육감들이 동요하며 누리과정 예산 2~3개월 치를 편성했다. 다수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관되게 요구하지 않고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것도 교육부 장관 황우여의 믿을 수 없는 국고 지원 밀약을 순진하게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강원·전북·경기 교육감들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보여 준 사악한 공격을 애써 부인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교육복지 예산 삭감에 필사적이다. 심지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와 황

우여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조차 새누리당 지도부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정부한테서 뒤통수를 얻거꾸 맞고 나서야 교육감들은 “이미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수 진보 교육감들이 보여준 동요와 오락가락은 최근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진보교육운동 진영의 교육재정 확충 요구 투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게다가 정부의 교육재정 책임 떠넘기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교육재정 삭감은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공공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이 줄고, 학급당 학생 수는 감축은커녕 오



복지 삭감에 필사적인 박근혜에 맞서려면 타협이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이 필요하다.

히려 늘어나게 생겼다. 교사들의 연구활동 지원이 중단되거나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삭감되는 등 얼마 되지 않는 교직원들의 복지도 줄 판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를 무려 16.7퍼센트나 삭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3분의 1이나 깎아, 비정규 교사들이 대거 구조조정될 위기에 처했다. 그간 정원 외로 배치됐던 수석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관련 예산 부족으로 정원 내 배치하기로 하면

서 학교별로 교사 1명씩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줄게 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도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사실 우리 나라 교육재정은 만성적 부족에 시달려 왔다. 그 결과 교육복지는 OECD 꼴찌다. GDP 대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14년째 1위다.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기준으로 33.4명인데 OECD 평균(23.5명)에 견줘 10명이나 많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늘리고, ‘누리과정, 돌봄예산,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관련 예산을 중앙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



세계경제

내년에는 “저단 기어”가 아니라 아예 후진일지도 모른다

마이클 로버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저자

OECD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그간 여러 국제 기구들이 자주 했던 예측을 주문처럼 되풀이했다. 세계경제가 “저단 기어를 놓고 주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경제는 여전히 성장 추세가 2008~09년 위기 전에 한참 못 미치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OECD 보고서는 “각국이 성장 지향 정책을 시행하면 세계경제 성장이 서서히 빨라질 것”이라고 썼다. G20 정상들이 ‘성장 지향’ 조치를 더 받아들이면 그리 될 것이라고 단서를 단 것이 함정이다.

OECD는 올해 세계 실질GDP 성장률이 겨우 3.3퍼센트에 불과하겠지만, 2015년에는 3.7퍼센트로, 2016년에는 3.9퍼센트로 “성장이 빨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조차 “위기 전에 비하면 느린 수준이며 장기적 평균치 이하이다.”

OECD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2퍼센트, 2015·2016년에는 3퍼센트까지 돼 세계경제의 완만한 가속(실제로 그런 가속이 있을지도 의문스럽지만)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OECD는 유럽과 일본 경제의 경우, 같은 기간에 1퍼센트 이상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11월 초 발행한 전망 보고서에서 유럽, 특히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위원회는 유로존 경제가 올해 0.8퍼센트, 내년 1.1퍼

센트, 2016년 1.7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반년 전에는 같은 1.7퍼센트를 내년이면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애초의 낙관적 예상치를 낮춘 것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연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식이다.

OECD는 이렇게 논평했다. “투자, 신용, 국제무역수지 등이 대체로 답보상태인 결과, 아직 세계경제는 광범하고 지속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지 못했다.” 유럽연합 경제부문 담당관 피에르 모스코비치도 대체로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명패한 해결책 같은 것은 없다. 경제는 회복 추진력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다.”

OECD가 세계 차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차원에서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반응이 빠른 경기선행지표가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런 예측에 의구심을 자아낸다. 향후 경제활동을 예측하는 지표로 마르크트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점점 더 많이 쓰이는데, 이 지표는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 경제 활동에 대한 경영자들 자신의 설문조사 답변에 기초한 것이다. 이 지수의 10월 결과를 보면,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 감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9년 이래로 G20 경제의 회복이 미약함을 지적했다.

“[2009년] 심각한 금융 위기 이후의 회복세는 이전의 다른 불황 후 회복세보다 미약하다 … 최근 추정치로는 소득이 급변 경제·금융 위기의 이전 수

준으로 돌아가는 데 6년 반(중간값)에서 8년(평균)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대불황 이후의 회복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대서양 양안[미국과 유럽]의 다른 어떤 경기 회복 때보다 느리다.”

투자 폭락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복을 보통 때보다 느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세계 금융 위기라고 강조했다. 경기 추락(2008~09년)과 그 이후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부채를 늘렸다. 그 결과, 금리가 0에 가까움에도 부채 상환 부담은 크게 남았다. OECD가 밝힌 것처럼, 현재 선진국 경제의 전반적 부채 수준은 2007년보다 실제로 더 높다. 중국도 그동안 다른 선진국들만큼 부채가 쌓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경제가 더 잘 회복된 것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

보다 부채를 더 줄일 수 있었다.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추이가 긍정적이어서 대차대조표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를 도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유럽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지연돼 투자 활동이 위축됐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성장률이 다른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수익성이 더 좋은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현금을 축적하고 자기 주식을 되사들였다. 그런 식으로 기업의 시장가치를 올린 덕에 경영진이 성과급과 스톡옵션으로 돈 잔치를 벌였을 뿐 아니라, 생산적 투자도 상대적으로 빨리 늘릴 수 있었다. 여전히 대침체 전에 비해 초라하지만 말이다. 인구 대비 생산적 자산 투자액은 모든 주요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여전히 2007년의 최고치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미국이 그중 낫긴 하다.

흥미롭게도, OECD는 1인당 개인

소비가 2005년 이래로 전혀 줄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내가 여러 글에서 지적했듯[예컨대, <노동자 연대> 110호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케인스주의가 긴축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관점과는 반대로 대침체를 부른 것은 소비 폭락이 아니라 투자 폭락이었다. 실제로, 그래프1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기업 투자와 실질 GDP 성장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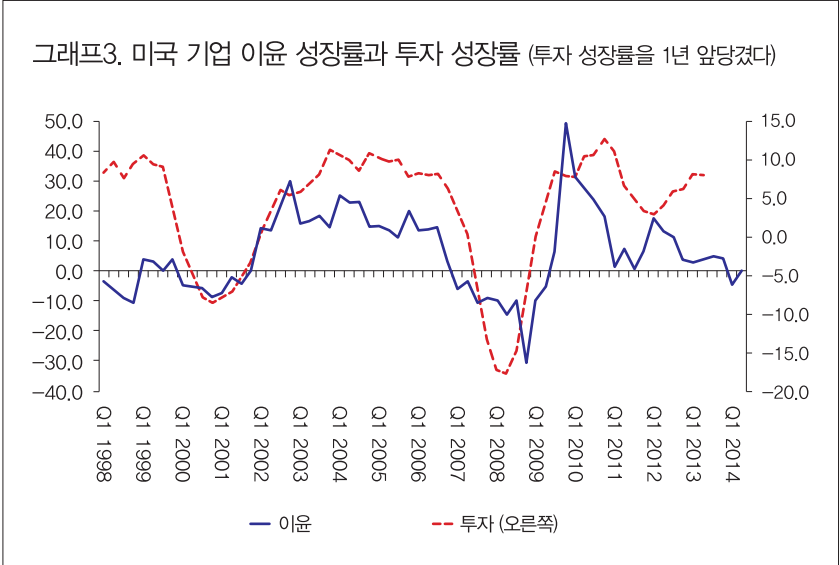
투자가 있어야 성장한다. 그리고 이익이 꽤 나는 곳에 투자가 이뤄진다. 나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간대학 교수 타피아 그라나도스를 비롯한 여러 명이 실증적 연구로 이를 밝혔다. 결국 경기 변동은 투자가 좌우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제 회복이 가장 잘 되던 미국조차 기업 이익이 이제 더는 늘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그래프2)

그래프3는 수익 성장률(파란선)과 투자 성장률(빨간선)을 비교한 것이다. 시각적 비교를 위해 투자 성장률을 수익 성장률보다 1년가량 앞당겨서 나타냈다. 수익이 줄어들어 결국 마이너스가 되면 1년 정도 후에 기업 투자도 폭락하며, 수익이 늘면 1년 안에 투자도 뒤따라 늘어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수익이 늘지 않아, 투자도 2015년 중반에는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GDP 증대와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1년 정도 안에 불황이 닥칠 위험이 커 보인다. 그럴 때 세계경제는 아예 후진 기어를 밟게 될 것이다.

출처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m>)
번역 김준호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사투 노총의 금속노조 제명

ANC와 단절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제명으로 답한 노조 관료들

11월 9일 남아공노총 코사투의 특별집행위원회가 산하의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히 코사투 내 권력 쟁투로 말미암은 분열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이 있다. 남아공 역사를 돌아보며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본다.

남아공의 자본주의 발전과 아파트헤이트(인종 격리·차별 체제)

김종환

17세기부터 백인 유럽인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정착촌을 건설했고, 흑인을 노예로 부렸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종차별은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발전하면서 근대적 형태로 변모한다.

남아공의 유럽계 백인 지배자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점차 흑인 노동인구에 의존하게 되면서 아파트헤이트라는 독특한 인종차별 체제를 고안해 냈다.

백인 지배자들은 흑인들을 남아

공 전체 영토의 13퍼센트도 안 되는 지역에 가둬 놓고는 ‘이주노동자’ 취급했다. 흑인이 남아공 인구의 압도다수(86퍼센트)를 차지했는데도 말이다. 지배자들은 남아공의 모든 산업 시설이 있는 90퍼센트가량에 이르는 지역을 “백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흑인이 “백인 지역”에 72시간 이상 머무르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적으로 흑인과 백인은 지위가 달랐다. 흑인은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도 없었다. 노동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코사투의 탄생과 아파트헤이트 철폐

1960년대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빠르게 늘었고 백인 노동인구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동시에, 생산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전까지 백인 숙련 노동자들이 했던 직종에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았던 흑인들이 진출하게 됐다.

1970년대 초 세계적으로 전후(戰後) 장기 호황이 끝나면서 닥친 경제 위기의 여파 속에 1973년 흑인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흑인 노동자들은 빠르게 조직해 1983년이 되면 노동조합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많아진다.

동시에, 1970년대 아프리카 대륙을 휩쓴 민족 해방 운동의 여파로 남아공에서도 타운십(흑인 거주구)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파트헤이트 반대 투쟁이 성장한다.

1984년 타운십을 중심으로 아파트헤이트에 맞선 투쟁이 거대하게 벌어지자 노동조합들도 여기에 빨려 들어온다. 흑인 노동자 계급 조직이 동참한 덕분에 1980년대의 타운십 투쟁은 과거와 달리 더 지속성이 있었다.

투쟁의 파고 속에 1985년 말 대다수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노총 코사투가 출범한다. 광원노조(NUM)와 나중에 금속노조(NUMSA)로 결집하는 노조들이 주축이었다.

코사투는 강력했고 매우 전투적이었다. 당시 서구에서는 노동운동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코사투는 노동자 계급이 여전히 사회 변혁의 주체임을 입증하며 전 세계 마

르크스주의자와 노동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줬다.

그러나 코사투는 정치적으로는 아프리카민족회의 ANC에 의존했다. ANC는 흑인 중간계급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스트 좌파 정치단체로, 공산당이 주도했다. ANC는 백인 지배를 타도한 뒤에 남아공이 나아갈 길은 흑인이 기업인으로 참여하는 자본주의라고 봤다. 당시 남아공 노동자 투쟁의 수위를 보건대, 단지 아파트헤이트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도 도전할 잠재력이 있었는데도 그랬다. 남아공 공산당은 스탈린주의의 단계혁명론을 따르며 ANC의 노선을 적극 합리화했다.

많은 노동조합 속 좌파 활동가들은 ANC와 공산당의 계급 협력적 민중주의 정치를 비판했지만 ‘노동자 주의’(연성 신디컬리즘)의 한계에 갇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코사투는 아파트헤이트에 반대해 수백만 명이 참가한 총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의 중심 대오였음에도 정치적 주도권은 ANC에게 내줬다.

ANC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이용해, 자신과 협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백인 지배자들을 위협했다.

1994년 흑인까지 참여하는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ANC가 집권하며 아파트헤이트는 무너졌다. 지배계급은 아파트헤이트는 포기했지만 ANC와 타협한 덕분에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ANC-공산당-코사투 삼각동맹과 마리카나 학살

ANC 강령에는 ‘모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실천에서 ANC 정부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했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했다.

ANC가 집권한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평범한 흑인들의 처지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못했다. 빈민 중 흑인이 백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도 바뀌지 않았다. 흑인들 내의 격차도 커졌다.

흑인 중간계급의 소수는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사기업의 경영인이 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배계급으로 편입돼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었다. 이제 남아공은 전체 소득의 51퍼센트를 상위 10퍼센트가 차지하고,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소득불평등을 0~1

사이의 값으로 수량화 하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0.63으로(2005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사투는 ANC-공산당과의 삼각동맹에 매어 있었다. 코사투는 1994년 이래 모든 선거에서 ANC에게 막대한 표와 자금을 제공했고, ANC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등장하는 것을 한사코 막았다.

그러나 아파트헤이트 종식 후 성장한 새 세대 노동자들은 삼각동맹에 대한 충성도가 낮았다. 2007~09년 이후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 2010년부터 노동자 파업이 빠르게 증가했다.

2012년 8월 마리카나 지역 백금 광산 파업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경찰이

광원들에게 발포해 파업 노동자 34명을 사망케 하는 일이 일어났다.

남아공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다. 흑인 정부가 흑인 노동자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마리카나 학살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ANC 정부에 품었던 환상의 마지막 조각마저 깨뜨렸다.

그런데도 코사투 산하 광원노조는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을 비난하며 ANC를 옹호했다. 그래서 수많은 광원들이 코사투 산하 광원노조를 탈퇴해 광원건설노조(AMCU; 코사투에 속하지 않음)에 가입했다.

올해 전 세계 백금가격을 들었다 놓으며 무려 다섯 달 동안 이어진 광원 파업 동안에도 코사투 광원노조 지도부는 한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새 노동자 정당 건설 운동과 코사투 분열 위기

코사투 조합원들 사이에서 더는 ANC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조합원 34만 명으로 남아공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가 이런 정서를 가장 적극 대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13년 12월 특별 대의원대회를 열어 더는 ANC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MfS)이라는 전선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코사투에도 ANC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11월 9일 코사투 특별 중앙집행위원회가 금속노조를 통째로 제명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날 금속노조 사무총장은 특별 중앙집행위원회를 박

차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결국 코사투 지도부는 ANC-공산당과의 동맹을 사수하기로 했다. 우리가 그 동맹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주장하자 우리를 제명했다.”

코사투의 금속노조 제명은 한국으로 치면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가 통째로 제명된 것에 비견된다. 실로 극적인 결정이고 향후 거대한 분열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미 코사투 산하 7개 노조가 공동 성명을 내어 제명 결정을 비판하며 코사투 상층 결정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코사투를 되찾겠다’며 코사투 특별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코사투의 위기는 단지 상층 노조 지

도부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마리카나 학살 이후 계속된 정치적 급진화가 반영된 것이다.

코사투 분열 때문에 남아공 노동운동이 곤두박질친다는 식의 관측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동안 코사투 지도부가 현장 조합원들의 염원을 외면하며 ANC-공산당과의 삼각동맹을 더 중시한 것이 문제였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을 배신한 ANC를 대신할 노동자 정당이 필요하다는 금속노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금속노조를 제명한, 코사투 지도부에 이번 코사투 위기의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기여가 기대된다

남아공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함된 민주좌파전선(DLF)은 2012년 마리카나 투쟁을 포함해 꾸준히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11월 19일에는 금속노조 제명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물론 그들은 새 노동자 정당 건설 과정에도 개입하고 있다.

남아공 노동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면 남아공 자본주의와 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코사투 건설 전부터 치열했다. ANC와 공산당은 남아공을 유럽계 백인 식민 정착자들이 아프리카 흑인을 지배하는 ‘내부적 식민지’라고 규정하고 흑인 중간계급과의 동맹을 옹호했다. 당시

좌파는 이런 다계급적 민주주의에 비판적이었지만 적절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새 노동자 정당 건설 과정에는 이런 정치적 논쟁이 재현될 것이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민족 억압뿐 아니라 남아공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려 애쓸 것이다.

또한 새 정당은 선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에 훨씬 더 비중을 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남아공 노동운동에는 전통적으로 타운십 등 ‘지역사회’와 작업장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

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새 정당이 작업장 쟁점뿐 아니라 실업자, 학생,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등의 문제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한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해야 할 논쟁은 산적해 있다. 지난 20년간 누적된 ANC에 대한 환멸과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 발휘되는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성은 코사투 분열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냈다. ANC와 결별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자 정당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리아 혁명 운동 참가 자원자의 목소리를 전한다

“전쟁 없는 세계를 원한다면 압제자에 대한 지원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오바마는 이라크 파병 규모를 2배로 늘렸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계속 폭격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현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 글은 영국에서 자랐지만 시리아 혁명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시리아로 돌아간 세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세 아들의 심정을 전하는 말이다.

그는 세 아들이 전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서방의 개입은 독재자를 도울 뿐이라고 주장한다.

주디스 오어

아부 바크르 디가이스는 시리아 내전에서 두 아들을 잃었다. 17살인 재퍼는 11월 초 시리아에서 살해됐고 압둘라는 지난 4월에 죽었다. 큰 아들 아미르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아부 바크르는 아들들의 죽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세 아들은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정권에 맞선 시리아인들의 혁명 투쟁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가족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 “아이들의 삼촌이 5년 동안이나 부당하게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사의 일부이며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점령군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자행한 잔혹 행위와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말했다. “그래도 저는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방해하면 다 죽이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방의 전쟁 때문에 아이시스가 생겨났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서구의 언론과 정부는 시리아 사태를 끔찍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을 비난하고 공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지난 5월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디가이스의 집을 급습했다. 그러나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정치인들이 국내에서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동안 서방의 폭격기들은 매일 이라크와 시리아를 폭격하고 있다. 서방의 폭격은 중동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쿠르드족 마을인 코바니는 구조는커녕, 지금도 아이시스에 의해 포위당해 있다. 11월 초 전 세계에서 쿠르드인 수천 명이 코바니를 지원하게 위해 시위를 벌였다. 그제서야 터키 국가는 페쉬메르가(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군사조직) 전사 수백 명이 터키 국경을 통과해 코바니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서구의 폭격으로 덕을 본 세력 중 하나는 아사드 정권이다. 아사드는 서방이 아이시스를 공격하는 덕분에 저항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사드의 저공 항공기가 폭약과 유탄으로 가득 찬 통을 폭탄처럼 민간인들에게 투하하고 있다. 시리아 북서부의 난민 캠프를 공격해서 최소 43명을 살해했다.

애초 디가이스 형제들이 시리아에서 싸우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잔인한 현실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큰 슬픔을 견디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들들이 자랑스럽다고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진 출처 European Commission DG ECHO

이라크 북부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1천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젊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짐을 짊어지려 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적대감을 남깁니다.”

[서구의] 주류 언론은 시리아에서 싸우는 젊은 무슬림들을 왜곡하고 이슬

람 혐오를 부추긴다. 그러나 [서구의] 일반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아부 바크르는 말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친절과 연대를 경험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날 멈춰 세우고 위로를 해 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내게 애도를 표하며 카드와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이 하는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유혈 사태가 사라진 세계를 원한다면 정부의 대외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압제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번역 최민혁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428호

홍콩 민주화 운동, 갈림길에 서다

홍콩의 민주화 투쟁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최대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장기간 점거를 유지하며 홍콩과 중국의 지배 세력에 맞서고 있다. 민주화 투쟁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지지가 커지면서, 10월 21일 홍콩 행정청 대표들이 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TV 생방송 토론에 나와야 했다.

이 운동은 2008년 이후 이집트, 스페인 등지에서 터져 나온 청년들의 반란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 신자유주의와 경제 위기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의 분노가 점거 운동으로 표출됐다. 이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부르주아 개혁주의 정당(홍콩에서는 “범민주파”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홍콩의 청년·학생들은 부르주아 개혁주의 야당 지도자들과 거리를 두

면서 전투적인 운동을 주도해 왔다. 홍콩에서 청년들이 강력하게 거리로 나선 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지금 이 투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만 명을 정점으로 참가자 규모도 조금씩 줄었다. 이 틈에 홍콩 당국도 공세를 다시 강화했다.

홍콩 민주화 투쟁이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투쟁이 조직 노동자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게다가 홍콩의 노동조합은 크게 두 노총으로 분열돼 있다. 그중 가장 큰 노총은 친중국 성향의 홍콩공회연합회(HKFTU)이다. 과거에 친중 노조들은 노동자 투쟁에서 커다란 구실을 했었다. 영국 식민지 당국에 보통 선거도 요구했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 노조들의 입장은 바뀌었다. 지금 홍

콩공회연합회 지도부는 민주화 투쟁을 반대하는 세력의 핵심을 이룬다. 이 점이 조직 노동자와 민주화 투쟁의 관계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노총인 홍콩직공회연맹(HKCTU)은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며 9월 28일 하루 파업을 호소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파업 규모는 작았다.

정치와 조직

홍콩 민주주의 운동이 어느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진 다른 이유도 있다. 운동 내에서 자발성을 예찬하기만 하는 분위기도 운동의 전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홍콩 민주화 투쟁에서 참가자들이 보여 준 자발성은 놀랍고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자발성과 정치·지도·조직화 문제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고 투쟁이 장기화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운동의 방향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레프트21 같은 좌파 단체들은 민주화 운동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노동자 계급을 겨냥해 사회·경제적 개혁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부 정치 세력’ 또는 정치 자체가 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율주의적 정서 때문에, 한동안 레프트21 활동가들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운동에 참여해야 했다.

그런데 아우름 같은 홍콩 사회주의 자들에 따르면, 이런 정서를 소수의 우익들이 악용하고 있다. 이 자들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싶어하며, 중국 정부와 맞서는 민주화 투쟁을 가로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다.

지금까지 운동 안에서 이들의 영향

력은 작다. 앞으로 홍콩 청년들이 홍콩과 중국의 노동자 투쟁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나아가간다면, 이런 자들이 운동 안에서 발붙일 여지는 사라질 것이다.

홍콩의 민주화 투쟁은 큰 파장을 낳았다. 한 세대의 청년들이 급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국 노동자들도 이 운동을 지켜봤고, 중국의 반정부 활동가 1백여 명이 중국 정부에 체포되는 것도 감수하고 홍콩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서 이 투쟁은 홍콩과 중국 운동에 일정한 퇴적물을 남길 것이다.

입증됐듯이 운동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권위주의적인 중국 정부에 맞서는 데서 성과를 얻으려면, 효과적인 전략과 정치적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주의 정치와 조직이 필요하다.

김영익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초4번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팀(이하 전재환 선본)은 핵심 가치로 “준비된 통합 지도부”를 내세운다.

전재환 선본은 십수 년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층의 주류를 이뤄왔던 세력들(이른바 중앙파·자주파·국민파)이 연합한 후보 조다. 현 집행부 승계 후보 조이기도 하다. 후보들 자신도 각각 금속, 보진, 지역본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거쳤다. 민주노총의 핵심 의결·집행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상층 활동 경험이 많은 것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폭넓은 대표성을 갖고 있고 상층 경험이 많으니 민주노총의 “통합과 단결”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투쟁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결정적 약점이다. 이들은 민주노총 상층의 보수적 투쟁 회피와 관료적 타성이 낳은 폐해에 공동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재환 선본의 주장에서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는 거의 없다.

전재환 후보는 2005~06년 비정규직 약법 통과 국면에서 금속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오랫동안 중진의 구성원이었다. 그러나 전재환 후보가 중앙 임원을 하지 않았으니 자신은 책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일하다. 어쨌든 그는 동료 관리들의 무사안일과 타성, 개혁주의를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 전재환 선본은 2016~17년 총·대선에 맞춰 준비된 투쟁을 하라고 주장한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은 무책임한 투쟁 대기론일 뿐이다.

또, 지역 순회 연설회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중앙위로 넘기고, 대의원대회는 중앙위 결정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의결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켜 관료적 조율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의원대회의 투쟁 결정을 일의로 유보·철회시키는 식의 태도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주의가 낳은 문제를 관리주의를 강화해 해결할 수는 없다.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

전재환 후보는 ‘TV 토론에서 ‘긴박하다고 해서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총파업 동참할 리 없다. 준비된 공세적인 파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급 전체의 요구를 걸고 전 조합원이 함께 준비하고 투쟁하자는 것에 투사라도 이의는 없을 것이다. 단위 노조 입단협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투쟁”론의 문제점은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를 이유로 지금 당면한 투쟁들을 회피·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탄압과 민주노총 침탈에 광범하고 즉각적인 분노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대중적 항의를 선언하지 않고 준비가 필요하더라 2월 말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런 소심한 대응은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무리수를 둔 정권에 도리어 한숨 돌릴 여유를 줬고, 정권의 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촉각만 둔감해졌다.

정작 두 달을 준비했다는 파업은 정권과 기업주들에게 별 타격을 주지 못했다.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는 말이 들어맞은 상황이었다.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민주노총 집행부는 즉각 파업하자는 선언조차 하지 않았다.

김종민 기자

준비된 투쟁론과 정권 교체

민주노총의 전략적 정치적 투쟁의 시기가 총대선 시기로 맞춰진 것을 보면, 이 투쟁의 핵심 목표는 정권 교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교섭의 대상이 될 개혁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로 귀결된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 하나가 “진보대통합”과 “반신자유주의 반박근혜 범국민전선”이다. ‘진보정치 통합’이 민주노총이 승리하는 아권연대—정권교체로 가는 지렛대인 것이다.

이는 제9대 김영춘 집행부가 2012년 총·대선 국면에 추구한 전략이다. 전략적 아권연대를 위해 노동운동의 투쟁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킨 결과, 정치 지형은 노동계급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총선 승리 후 총파업’ 계획은 총선 패배 후 호지부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한편, 전재환 선본의 전략은 진보당 중앙위가 인준한 “당 혁신과 진보정치

단결을 위한 우리의 출발” 문서와 흡사하다. 중앙파와 국민파 지도자들 다수면, 이 투쟁의 핵심 목표는 정권 교체라 하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선거 연합을 하고는 이제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진보당은 이 문서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새로운 진보대통합은 민주노총 전능 전여능 중심의 진보대통합이어야 한다 … 진보대통합에 기초해서 아권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진보대통합

그러나 최근의 쌍용차, KEC, 현대차 비정규직, 철도, 전교조, 공무원연금 등 숱한 문제에서 새정치연합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노동자들이 투쟁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양보를 하도록 종용하는 구실을 해 왔다. 이 당이 자본가 계급의 비주류에 기반을 둔 신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투쟁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일관된 투쟁 건설 노력을 해친다.

더구나 이런 전략에 따라 ‘진보대통

합’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배타적 지지 방침 결정 시도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킬 것이다.

진보·좌파 다원주의와 정치 방침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방어를 위해 특정 부분의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조직이다. 정치적 견해는 불가피하게 다양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2008~12년에 사본오 열해 재규합이 난망한 지금, 진보정당과 좌파들 안에서 자유롭게 지지를 선택하는 진보·좌파 다원주의가 투쟁으로 조합원들을 단결시키는 데에 현실적이고 현명하다.

한편, 전략적 아권연대는 분명히 반대해야 하지만, 모든 아권연대가 문제라는

좌파 일각의 고집은 지나치다. 국회에서 특정 개혁 입법 발의를 쟁취하거나 특정 약법을 저지하려고 부르주아 야당과 불가피하게 전술적 공조를 취해야 할 때도 있다. 선거에서 특별히 수구적인 후보에 맞서, 그리고 그에 비해 민주당 후보가 노동자들에게 진보적으로 비쳐지는 인물일 때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추진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최근 노동조합 투쟁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권연대 노선 탓만은 아니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와 개혁주의가 가장 큰 약점이었다.

허영구 후보 조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

기호3번 허영구 후보 조는 좌파노동자회가 낸 팀이다. 좌파노동자회는 이번 임원 직선제에 대한 좌파 공동 대응 논의에 참가했다가 중도 하차했다. 독자 후보를 내서 좌파노동자회 교유의 주장을 선전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봤기 때문인 듯하다.

그 교유의 주장은 “5대 혁신과제”로, 목표·주체·투쟁·조직·노동자정치라는 5대 영역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좌파노동자회가 이 제안의 핵심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과제는 불안정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직체계와 재정체계의 개편”이다.

또 다른 좌파 후보인 기호2번 한상균 후보 조가 투쟁을 강조하는 반면, 허영구 후보 조가 조직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꽤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투쟁해야 혁신도 있다” vs “혁신 없이 —인용자 투쟁을 강조한다고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아니다. 좌파노동자회가 조직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단체의 더 깊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런 점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허영구 후보가 한상균 후보 측의 비판을 의식한 듯이 “투쟁과 혁신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은 아쉽다. 몰타기보다는 문제의식을 선포하든 데도 도움이 될 텐데 말이다.) 이하에서 그 문제의식을 살펴보자.

혁신의 주체는 누구인가?

좌파노동자회는 민주노총이 “자본에 포섭”됐고, “어용의 길로 돌아섰[고]”,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본다. 그들이 겨누는 비판의 대상은 상층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만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주요 구성원인 정규직 노동자도 그들의 표적이다.

허영구 씨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계급의 상



김종민 기자

“체제 내에 포섭된” 정규직?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를 위협한 철도 노동자 파업.

층”에 위치하고 있고, “자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통해 착취한 잉여분의 일부를 … 뺏고몰”로 받는다. 그래서 옆의 노동자가 죽고 다쳐도 “자신의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면 그만”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정규직 노동자들의 우산 구실을 한다.

민주노총과 그 주요 구성원을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투쟁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좌파노동자회는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대거 조직해 그들이 민주노총의 중심이 돼야 비로소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조직 혁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혁신 우선론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신이 근저에 깔려 있다.

그러므로 좌파노동자회가 주장하는 “민주노총 혁신”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주인공이 아니다. 혁신의 주체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집행부, 권한이 강화된 지역본부, 집행부가 고용한 1천 명의 전략조직가가 될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에 들어가는 돈을 대는 것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비정규직 투쟁 경험은 이와는 다른 것을 알려 준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과 그 투쟁을 방아르는 정규직의 실질적인 연대라는 것이다.

진정한 좌파라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직장과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도록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고 “이중구조화”돼 서로 연대할 수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선을 긋는 것은 사용자 측의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에 말려들어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뿐이다.

신자유주의와 대안 전략

좌파노동자회는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 보편적 현상이고, 노

동조합 운동이 필연적으로 퇴조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이 열악해지고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언제든 폐기 처분될 수 있는 일회용처럼 된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조합이 수 세적이고 방어진 위치로 내몰린다는 것도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 가령 1998년 정리해고와 파견제가 도입되면서 고용 불안이 증대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과 국가를 도와야 한다는 압력에 부응했기 때문이지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뒤 여러 차례 반복된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파업 철회와 투쟁 회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허영구 후보 조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개혁주의라는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노동조합 조직 구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산별노

조는 산업 자본주의에나 걸맞은 노동자 조직 전략이라며 민주노총의 골간을 지역본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별 근거가 없다.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자는 자본주의에서 언제나 있었고, 기존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왔다. 오히려 단위노조와 산별연맹 지도부가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조직 형식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허영구 후보 조의 주장은 노동조합 관료주의 문제를 애써 회피하면서 조직 구조 개편이라는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는 변명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조합 운동이 필연적으로 퇴조한다는 좌파노동자회의 견해는 더 근본적으로 고용 노동자 중심의 전략에 대한 회의로도 연결된다.

물론 이 회의는 허영구 후보 조의 선거 공약 전만에서는 분명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시간단축과 기본소득 도입 공약의 제출 배경을 살펴보면 이 회의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즉, 허영구 후보 조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고용소수” 시대로 보고(이는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무망한 고용보장 또는 정규직화 요구가 아니라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소득이 보장되는 기본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허영구 후보 조가 투쟁 공약으로 “절거하라” 운동을 분단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런 회의와 무관하지 않다. 국채적으로 벌어진 광장 점거 운동은 국의의에도 불구하고 (오를랜드를 제외하면) 조직 노동자의 결정적 힘을 가동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도 좌파노동자회는 고용 노동자들이 이윤체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써, 효과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전재환 선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이제 산별연맹과 기업별 입단협 투쟁을 뛰어넘[고] … 시기 집중이라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주노총 중심성을 확보 … 전략적 투쟁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개별 사안에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정치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5대 이수호 집행부가 2004년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내놓은 바 있다.(“준비된 총파업”)

당시 중앙파 집행부는 실질적인 투

쟁 조직은 하지 않으면서 파업 계획만 남발한다는 투쟁적 조합원들의 불만을 샀다. 이수호·이석형 후보 조는 이를 차용해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조직 노동계급 전체를 동원하는 정치투쟁에도 전혀 이롭지 않았다. 이수호 집행부는 ‘2006년 준비된 총

파업’을 말해 놓고는 2004~05년에는 아무런 정부와의 사회적 합의에 매달렸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 약법,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을 막지도 못하면서 투쟁을 남발하지 말자는 주장은 그동안 파업을 회피한 소심함과 개혁주의를 은폐한 채, 투쟁을 자제하고 교섭(개별, 산별, 노사정)을 더 중시하자는 말이다.

이런 입장은 조직 노동계급 전체를 동원하는 정치투쟁에도 전혀 이롭지 않았다. 이수호 집행부는 ‘2006년 준비된 총

파업’을 말해 놓고는 2004~05년에는 아무런 정부와의 사회적 합의에 매달렸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 약법,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을 막지도 못하면서 투쟁을 남발하지 말자는 주장은 그동안 강승규 부위원장의 수괴 사건 폭로로 중도 사퇴했다.

지도부가 파업 건설에 소홀했는데도 2004년 11월 비정규 약법 반대 하루 파업에 15만 명(단체행동 포함하면 21만 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연말 두 차례 총파업에는 6만, 2만 명이 참가했다. 2006년 조준호 집행

부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3월 하루 총파업에 19만 명이 참가했는데, 정작 법안이 통과된 11월 말과 12월에는 10만 명도 안 됐다.

조준호 집행부와 산별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로드맵의 연말 통과가 불확실하다며 12월 15일 파업을 취소해 버렸다. 옛세 뒤에 약법은 여유 있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폴란드계 독일인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노동조합 상층 관리들의 어려서움을 다 음과 같이 비판했다. “대중파업을 위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진정한 책임의 회피

기업과 산별 노조는 입단협을 하고,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은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다. 개혁주의에 특징적인 정치 운동과 경제 운동의 분업이 노동운동 내에서도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투쟁이라 해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이 걸린 투쟁이 될 수 있다. 개별 투쟁들의 성패가 불가피하게 전체 계급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곤 한다.

그러나 역할 분담론은 민주노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의 투쟁에 대한 연대 건설을 회피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

비정규직 약법 시행 시기와 맞물린 2007년 이랜드·뉴코아 점거 파업은 비정규직 약법의 기반성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의제를 한국 사회의 중심에 올려 놓았다. 파업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수호—조준호 집행부를 계승한 이석형 집행부는 외곽 지원만 조직했을 뿐, 실질적인 연대 조직은 서비시연에 맡겨 놓았다. 투쟁은 결국

1년을 넘게 끄는 장기 투쟁으로 가야 했다.

세계경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와 이에 맞서는 점거 파업도 경제 위기와 통전가 문제에 대한 불만의 초점을 이뤘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이나 공장을 점거하고 살인 진압에 맞선 것은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기업주들이 뿔뿔 뿔쳐 공격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도 노동계급 전체의 방어를 조직해야 했다. 그러나 통합집

행부였던 임성규 집행부는 이런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양보교섭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연대 파업 책임은 급속노조로 넘겨졌고, 급속노조 지도부는 질질 끌며 경찰에 진압되면 연대 파업을 벌이겠다는 등 투쟁을 회피했고, 결국 파업은 패배했다.

박근혜 정부의 각개격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고 벌인 철도 민영화에 맞선 파업에 민주노총이 제대로 맞서지 못해 투쟁은 어려움을 더 겪었다.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운동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적용되지 못한 것도 덧붙여야겠다. 왜 노동자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위는 질질 끌며 경찰에 진압되면 연대 파업을 벌이겠다는 등 투쟁을 회피했고, 결국 파업은 패배했다.

이제 투쟁적 조합원들은 이런 무사안일한 지도자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

정용건 후보 조

사회연대전략으로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는 이유

정용건 후보는 민주노총이 연금, 의료 등의 '사회 안전망 제도화'를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이루려면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용건 후보는 진보정당들을 통합하고 야당과의 연대를 확대해 사회복지 제도화를 추진해 가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일 배신을 일삼는 새정치연합에 기대서는 이를 이룰 수가 없다.

그나마 이들의 배신을 막으려면 기층의 힘이 강력해야 하는데, 정용건 후보는 산별연맹이 임·단투는 말고 민주노총 중앙은 사회개혁 투쟁을 하는 다소 기계적인 분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분리 는 사회개혁을 성취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민주노총이 사회개혁 과제와 현장 조합원들의 경제 투쟁을 잘 결합시켜야 그 동력으로 사회개혁도 성취할 수 있다.

정용건 후보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해 투쟁 동력을 극대화하는 데도 약점이 있다.

단적으로 정용건 후보는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확대해 가자고 한다.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보험료(세금)을 올리면 부자들도 세금을 올리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꽤 낯익다. '사회연대전략'은 이 선분의 임성규 선거대책본부장이 2009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임성규 전 위원장은 당시에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하고 그 대신 사회적 간접임금을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규직의 선(先) 양보가 곧 비정규직의 소득과 조건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맹점이 있다. 오히려 정규직 책임론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려 노동자들의 단결에 해롭다.

'사회연대전략'은 투쟁으로는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없다거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체제에 포섭돼 연대 투쟁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주의를 깔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벌어진 철도, 전교조 등의 투쟁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에 주고 투쟁에 나서는 데 도움을 준 데서 보듯이, 이런 비판적 인식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도록 이끄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 격차를 줄이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비정규직 처지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야권 연대로는 공무원연금을 지킬 수 없다

정용건 후보는 옹계도 당면 투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과의 공조를 강조해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다'는 개악안의 기본 방향을 수용하고 자체 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연대를 강조하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라는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 내 분열을 야기해 투쟁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집권 시절인 2007년에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한 바 있고, 최근에는 박근혜의 기초연금 배신에도 합의해 줬다. 따라서 이런 야당에 의존해서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을 수 없다.



의료 민영화가 노동자 계급에게 재앙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병원,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기를 막아야 한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1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은 교육, 의료, 방송통신 분야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킨다. 사회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소인 공공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성격을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의료 관련 내용만 보더라도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노골적인 민영화 내용을 담고 있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이다. 사실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다.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정책을 워낙 많이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본지 134호,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참고하십시오]

그럼에도 굳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상위 권한자가 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즉,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구실을 축소시키고, 기재부 독재로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단호하다.

그런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어젖히는 과정이 어이없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호중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이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 추진을 막겠다며 공언해 온 새정치연합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내놓은 계획들을 올해 안에 법적·제도적 절차를 완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11월 20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외국인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인 의사'를 10퍼센트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허술한 규제마저 없애 버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 정부

가 지금까지 영리병원 허용의 구실로 내세운 '외국인 환자 유치'는 껌데기만 남는다. 의사결정도 전부 내국인이 하고, 국내 의사들만 고용해 국내 환자를 볼 수 있는 영리병원이 된다. '영리병원 1호 산악병원 승인 취소'라는 개망신을 당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곳곳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박근혜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축소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의료기술평가는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국가가 무엇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다. 안전성만 입증되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병원이 '제한적 신의료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용은 환자들이 부담하게 만들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제외 항목을 대폭 늘려 안전성과 효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의료기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내용은 그 평가 기간마저 단축시키려는 것

이다. 졸속 평가도 문제지만, 이렇게 평가 기간이 줄어들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는 반면,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업체에게는 큰 이익이 돌아간다.

굳이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0월에 의료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상정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재정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투쟁이 일단락됐다고 여기고는 이참에 모든 개악 조치를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새정치연합의 무기력하고 일관되지 않은 대응이 이들의 공격 자신감을 높여 주고 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이 지도부 선거를 치르느라 대응이 느슨해진 기회도 노린 듯하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대열을 신속히 재정비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도 연임이 확실시되는 만큼 또다시 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 태세를 보여 줘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단 하나의 의료 민영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정책이 결국 병원 현장에 적용돼야 실현되는 만큼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영리 자회사, 부대사업 확대도 실제 시행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미안 치트코는 올해 초 런던에서 15명에게 습격당했다. 그는 〈가디언〉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폴란드로 돌아가, 네 고국으로 돌아가’ 하며 저를 때렸습니다.”

영국에서는 폴란드인에 대한 증오 범죄로 체포되는 이가 하루 2명에 달한다.

인종차별과 공격은 대부분 여전히 흑인과 무슬림을 대상으로 벌어진다. 그러나 불황이 시작된 뒤로 동유럽인에 대한 공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초 한 폴란드인 단체는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폴란드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 때문에 영국과 폴란드 간의 좋았던 관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폴란드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없애는 데 힘써 달라.”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인들은 백인이고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므로 동유럽인에 대한 편견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틀렸다. 인종차별은 단 한 번도 단순히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영국에서 아일랜드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광범하게 존재하지만, 아일랜드인은 대부분 백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나치의 홀러코스트(대학살)도 유대인 등 주로 백인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나치는 폴란드인을 비롯한 슬라브인도 자신의 지배를 받아야 할 열등한 인종으로 여겼다.

홀러코스트의 잔인함 때문에 생물학적 인종차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오늘날에는 1945년 이전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서열

언제나 인종차별 관념은 피부색에 대한 편견 이상의 것을 의미했다.

18세기 신흥 자본가들은 아프리카인을 잔혹하게 노예로 예측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을 분류했다. 당시 그들은 계몽주의와 평등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하면서도 그랬다.

어떤 이는 세계 인류를 과학적으로 분류하려는 것이 계몽주의 운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종 분류는 서열을 매겨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웨덴 식물학자 칼 린네는 현대의 생물학적 인종 분류를 확립했다. 1734년 그는 인간을 네 인종으로 분류했다.

그가 내린 정의 중 두 가지 예시를 보면 객관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판단이 결합된 해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시아인: 누런 피부색, 음울하다, 완고하다; 검은색 머리카락; 짙은색 눈동자; 엄격하다, 거만하다, 탐욕스럽다; 혈명한 의복을 입는다; 의견에 따른 질서 유지.

“유럽인: 흰색 피부, 낙관적이다, 근육질; 긴 머리카락, 유창하다; 파란 눈; 점잖다, 예리하다, 독창적이다; 꼭 맞는 의복을 입는다; 법에 따른 질서 유지.”

이것은 과학자들이 인간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식민 제국이 확장되면서 지배계급은 유럽인을 북유

럽인, 지중해인, 알프스인의 하위 집단 세 개로 나누었다. 여기에도 서열이 있었고, 북유럽인이 최상층이었다.

우생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1869년 영국에서 〈천재성의 세습〉이라는 영향력 있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통계학적으로” 인종 등급을 나누었고, 심지어 영국인들 사이에도 종족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저지대와 잉글랜드 북부지역 주민들의 평균적인 수준은 잉글랜드 일반인들의 수준보다 높다.”

1862년 영국 왕립인류학협회장인 존 베도는 《영국의 인종들》이라는 책을 썼다. 거기서 그는 턱 모양으로 천재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천재들이 “정악적”, 즉 턱이 안쪽으로 들어간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일랜드와 웨일스 사람들의 턱은 큰 경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이런 견해는 전혀 황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관념들은 지배계급의 지위를 정당화했고, 유럽인의 지배를 자연의 질서에 따른 것인 양 생각하도록 했다.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는 계급을 뛰

어넘어 단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긴다. 이런 사상은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착각을 자아낸다. 신흥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고자 할 때 다른 계급들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착각을 조장했다.

계급

노동자 계급이 이런 관념을 받아들이면 분열되고 약해지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이런 관념을 매우 존중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 계급을 속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자본가들은 실제로 그들 자신이 다른 인종보다 뛰어나고 남들을 지배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관념 탓에 많은 노동자들은 국민국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본가들의 부를 늘려 주기 위해 착취당한다.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변화했다.

미국은 유럽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 덕분에 성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주민들이 자기 자신을 흑인 노예나 미국 원주민들과는 다른 존재로 생각하도록 부추겼다.



사진 출처 Jacob Arriales (플리커)

인종차별은 단지 피부색에 따른 것이 아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반감 속에서 인종차별적 우익 정당인 영국독립당이 성장했다. 다음 글은 서구의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 〈노동자 연대〉

그러나 20세기 초가 되자 미국 지배자들은 백인 이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백인 이주민 중에서도 일부 집단이 다른 백인들보다 더 곱칫거리라고 여기게 됐다.

1922년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기자 케네스 로버츠는 《왜 유럽인들은 고향을 떠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민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북유럽인들이 미국을 세우고 발전시켰다. 만약 알프스인, 지중해인, 유대인 수백만 명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틀림없이 중앙 아메리카인과 동남부 유럽인 같은 쓸모없는 잡종만 미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리 잡은 노동자와 이주민을 이간질하는 시도는 오늘날 영국에서 대중 매체가 무슬림과 동유럽인들에게 퍼붓는 온갖 모욕과 비슷하다. 인종의 차이는 국적·민족의 차이와는 구분되지만 둘 사이에는 얼마든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영국인들이 독일인에게 보이는 적대감은 외국인 싫어하기로 볼 수 있지만 인종차별은 아니다. 그러나 인젠가

힘의 관계가 바뀌면 독일인이 박해받는 소수가 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20년 전 영국에는 폴란드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 하나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서로 적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뛰어난 반(反)인종차별주의자 W E B 뒤부아는 노동자들이 갖는 잘못된 인종차별적 특권의식을 ‘심리적 임금’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심리적 임금’은 백인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이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심리적 임금’으로 인해 그들은 실제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뒤부아는 미국 남부의 흑인과 백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종차별이 그들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연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오늘날 세계 어디서도 사실상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두 집단의 노동자들이 이토록 서로 깊이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곳은 또 없을 것이다.”

경제 위기

과학을 동원한 인종차별은 홀러코스트의 잔인함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되살아나서 유럽인들을 또다시 인종으로 나누고 인종 간의 서열을 세우고 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전쟁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의 싸움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쟁의 대부분은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 사이에서 벌어졌다. [둘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 〈노동자 연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인종차별을 끄집어 내서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이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주장했다.

인종차별의 귀환은 경제 위기와 맞물린 것이었다. 유고슬라비아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들은 40년 넘도록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소속국 각각의 지배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용했다.

인종차별은 결코 단순히 개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문제가 아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인종들 간에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식의 접근은 인종차별 문제의 근원이 여러 집단 사이의 편견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없애려면 인종차별과 속죄양 삼기(책임 전가)의 진정한 원인에 맞선 적극적 투쟁이 필요하다.

오늘날 영국에서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지역 출신자들과 무슬림이 겪는 인종차별은 동유럽인들이 겪는 차별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동유럽인과 로마인[‘집시’는 이들을 경멸조로 부르는 것이다 — 〈노동자 연대〉]에 대한 편견이 심해진다고 해서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저 온갖 종류의 인종차별이 더 용인되는 분위기만 조성될 뿐이다.

켄 올렌데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28호 / 번역 이진화

논쟁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노동자 계급의 지위가 변했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더는 사회 변화의 핵심 세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흔하다. 이와 관련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기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서 벌어진 논쟁을 소개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은 제인 하디와 조셉 추나라의 견해에 동의함을 미리 밝혀 둔다. 조셉 추나라는 내년 2월 6일(수)일 서울에서 열리는 맑스즘2015 연설을 위해 방한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새 국면이고, 노동자 계급과 자본 모두 심대한 변화를 겪었다

닐 데이비스

자본주의 역사의 한 국면인 신자유주의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필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또는 특정 정책들) 이상으로 보는 데 회의적이었다. 특히 크리스 하먼이 그랬다. 1973년 이후의 시기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신자유주의를 사용하기를 꺼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타당하고 다른 하나는 타당하지 않다. 금융화와 부채 증가 같은 신자유주의의 일부 양상들을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담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는 타당하다. 국제사회주의 경향은 위기를 금융화가 아니라 이윤을 저하 경향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연속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1973년부터 새로운 단계(또는 시기)가 시작됐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토니 클리프는 1970년대 말 영국 노동자 계급 운동의 상태를 “침체기”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는 사회의 성격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은 자본주의 발전의 새 시기의 시작이었다. 계급 간 세력관계뿐 아니라 사회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에는 이를 알아채야 했다.

물론 노동과 자본 둘 다 심대한 내부 재편을 겪는 새 시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큰 일이라서 눈앞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서 신경을 분산시키는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없으면 눈앞의 과제들을 성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1950~60년대의 장기 호황기에 세계경제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국제 무역이 확대됐다. 둘째, 생산의 국제화 수준이 증대됐다. 물론 이 변화의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다국적기업들의 입지가 개별 국가들보다 강해진 것이 사실이다. 셋째, 주로 금융과 관계된 변화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해외직접투자 FDI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과 화폐자본의 이동이 국경의 제약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본의 이익을 거스르는 듯한 정부 정책이 공격에 취약해졌다.



이후(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는데, 그 직접적 전제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자본주의 기업들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둘째, 1973~74년 다시 경제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애슐리 라벨이 지적하듯이,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등장의 “근접” 원인이라면, 전후 호황의 종식은 “궁극” 원인이다. “경제 여건의 변화는 결국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지형을 바꿔 각국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알 캄벨이 썼듯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방책이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기존의 “정책, 실천, 기구들”은 더는 자본 축적을 위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가 이윤율과 자본 축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자본주의는 케인스주의적 타협을 내 버렸다.”

지배계급의 의식적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전후 호황의 종식

과 전후 호황이 낳은 조건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신자유주의의 특질

데이비드 하버는 신자유주의가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복원하고 자본 축적을 위한 조건을 다시 세우는 데서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에는 신자유주의가 이윤율의 지속적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드 맥넬리가 지적했듯이, 장기 호황기의 이윤율 수준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문제다. 첫째, 자본주의처럼 역동적인 체제가 40년 동안이나 위기를 겪는다고 보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둘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과 달리 자본가들과 경영진은 자신들의 현재 처지를 40년 전의 조건과 비교해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뮌헨과 레베가 썼듯이, “경영진의 목표는 사회 질서에 따라 달라진다. …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주식시장과 자본소득이 주요 목표가 됐다.”

1982년 신자유주의적 호황이 시작됐는데, 네 가지 요인이 중요했다. 첫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노동자 착취가 증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국가는 이전 시기보다 신자유주의 시기에 더 강해졌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기에 생겨난 변화는 무엇인가?

국가 지출의 규모나 국가 개입의 영역보다는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달라졌다. 그 과정은 “착각이 라기보다는 방향 전환”이었다. 국가가 자본가들에게 더 열심히, 더 오래 일 시키기,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의 몫을 줄여 서(실질임금을 삭감하기) 가능했다.

둘째 요인은 가계 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맥넬리가 지적하듯이, 신용 거래는 1982년 회복의 동력이 고갈된 직후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부채 증가는 신자유주의 호황의 성격과 큰 관련이 있다. 체제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성장은 제조업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필수 서비스를 상품화한 민영화의 효과까지 더해져 노동자 계급의 필요경비가 증가하고 가

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셋째 요인은 하버가 말한 “탈취를 통한 축적”이다. 이 개념에는 중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지만, 영국의 맥락에는 꽤나 잘 들어맞는다.

넷째 요인은 이윤율이 자본가들의 기대 수준만큼 지속적으로 오르지 못한 결과, 생산에 투여되는 잉여가치의 비중이 감소하고 축적되는 잉여가치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그리 매력적이지 못할 때, 잉여 자본이 수익성 있는 사용처를 찾아 산업자본에서 금융 투기로 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본주의 체제는 어느 순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가 이윤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자본가 계급을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것은 부와 자원을 지배계급에게로 돌린 것이다. 이런 부와 자원의 이전은 일반적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뮌헨과 레베는 지배계급의 자산에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먼저, 1970년대 초반 지배계급의 자산이 “비교적 하락”한 것이다. 그다음, 197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기치 하에서 복원되고 더 많아진 것이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자본가 개인들의 부를 증가시키고 빈민과 노동자 계급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려 자본가 계급에 득이 됐다.

국가의 구실과 관련해서는 이론과 현실이 충돌한다. 민영화가 시행됐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국가는 이전 시기보다 신자유주의 시기에 더 강해졌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기에 생겨난 변화는 무엇인가?

국가 지출의 규모나 국가 개입의 영역보다는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달라졌다. 그 과정은 “착각이

라기보다는 방향 전환”이었다. 국가가 자본가들에게 더 열심히, 더 오래 일 시키기,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의 몫을 줄여 서(실질임금을 삭감하기) 가능했다.

둘째 요인은 가계 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맥넬리가 지적하듯이, 신용 거래는 1982년 회복의 동력이 고갈된 직후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부채 증가는 신자유주의 호황의 성격과 큰 관련이 있다. 체제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성장은 제조업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필수 서비스를 상품화한 민영화의 효과까지 더해져 노동자 계급의 필요경비가 증가하고 가

변모했는가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변모를 겪었지만 여전히 큰 잠재력이 있다

제인 하디와 조셉 추나라

신자유주의는 실제로 어땠는가?

닐 데이비스가 지적했듯이, 장기 호황기부터 자본의 국제적 통합이 증가하고,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국제적 금융 이동이 확대됐다. 우리 국제사회주의 경향이 이런 변화를 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 크리스 하먼은 〈좀비 자본주의〉에서 그런 경향을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정형화된 유형들로 분류하려는 [유형학적] 관점과는 거리를 두어 한다. 그런 관점의 예로는 조 절학파가 있다. 조절학파는 1970년대 위기 이전 시기를 “포드주의” 시기로, 그 이후 시기를 “포스트 포드주의” 시기로 구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자본주의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자본주의의 피상적 특징을 포착하려는 방식도 거부해야 한다.

닐 데이비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격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아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를 자명하고 일관된 사상 체계로 보고 그 내용에 관해 좌파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프로젝트로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때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때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를 필두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이 국가의 제한된 구실, 사유재산과 경쟁의 결정적 중요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실용주의적이었다. 즉, 그 청사진은 순수한 자유시장이라는 이상향을 분명히 가리켰지만, 그것은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다. 닐 데이비스도 인정하듯이,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완전한 후퇴를 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 축적과 이윤 회복을 위해 국가를 장악하고 재편하는 과정을 뜻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일부로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를 강조한다.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는 그것의 현상을 국제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으로 옮김으로써 원래 지역 주민과의 교섭에서 철수할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도 자본이 이동하는 능력이 커서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을 점점 더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위험하다. 입지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본에 직면해서 노동자들이 힘도 없고 수동적으로 당한다는 부분 조직화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신자유주의가 지배계급의 한결같은 전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주먹구구식이고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정도, 자본 축적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효능 등을 두고 지배계급 내에 분열과 긴장이 있다. 또, 나라마다 이런 점들에 차이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한결같고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보면, 지배계급의 자신감이나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과대 평가하게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 약점, 모순, 역사적 특성을 알아야 자본주의의 취약성과 지배계급이 처한 딜레마를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닐 데이비스의 이해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첫째, 그가 영국을 초점으로 서술해서 그런지 영국 자본주의의 특징에서 비롯한 결과와 세계 체제 전체의 일반적 경향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에서 장기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효과와 최근 시기의 구체적 특징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노동자 계급의 내부 구조 변화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조업 쇠퇴는 신자유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모든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본의 축적과 “유기적 구성”(마르크스의 용어)의 증가로 말미암은 장기적 노동생산성 증가에서 비롯한 것이다. 달리 말해, 더 적은 노동자라도 전과 같은 양의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향은 제조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기계화와 기술 혁신이 쉽게 때문이다.

어떤 경향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두 가지다. 첫째, 제조업에서 노동인구가 빠져나간다. 그러나 결국 경제의 다른 분야로 유입된다. 둘째, 생산성이 증가하면 특정 생산물에 달가는 가치가 감소해 생산물의 가격이 떨어진다. 노동자들의 잠재적 구매력이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레저와 소매업 같은 서비스 부문이 확장될 토대가 마련된다.

게다가 자본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해진다. 자본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간에 의한 공간의 폐지”(마르크스, 《그룬트리제》)를 위 한 물류와 유통이 중요해진다. 생산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변화하면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이 있고 조직할 능력이 있다.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파업까지 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회계와 마케팅 같은 기능도 중요해진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들이 생겨난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 의료 등 노동력 재 생산에 필요한 일자리가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예를 들어, 2009년 OECD 나라들의 전체 고용에서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퍼센트였다.

노동과 노동자 계급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닐 데이비스는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변화를 분석하며 “성장은 제조업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장이 함축돼 있다. 첫째, 최근 장기적 노동생산성 증가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새로 생겨났고, 자본가들에게도 전과 같은 양의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향은 제조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기계화와 기술 혁신이 쉽게 때문이다.

노동은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를 창출해야 마르크스의 개념으로 생산적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부문의 많은 일자리들은 생산적이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잉여가치는 생산적 자본가들과 비생산적 자본가들 사이에서 분배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생산적이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덜 힘겨웠음을 뜻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잉여가치는 생산적 자본가들과 비생산적 자본가들 사이에서 분배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생산적이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덜 힘겨웠음을 뜻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잉여가치는 생산적 자본가들과 비생산적 자본가들 사이에서 분배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생산적이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덜 힘겨웠음을 뜻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을 멈춰 은행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는 것을 막을 잠재력이 있다.

의료나 교육 같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부문 고용이 꽤나 꾸준히 증가해 왔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서 노조 조직률이 50퍼센트 이상 정도로 높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특권층인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 슬라보예 지젝은 2012년 초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봉급받는 부르주아지”라고 잘못 일컬었다.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화”해 왔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그랬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 보고 있고,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 형태의 천대를 받고 있고,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 형태의 투쟁과 저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자 계급의 (내부)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상당한 집단적 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조직이 등장할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힘도 약해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적대적이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에게 자본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해진다. 자본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간에 의한 공간의 폐지”(마르크스, 《그룬트리제》)를 위 한 물류와 유통이 중요해진다. 생산이

불안정 노동이 증가한다는 주장과 현실

닐 데이비스는 최근에 생겨난 일자

리들이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고 했지만, 이와 상충하는 근거가 많다. 미국과 캐나다(1983~2002년), 유럽연합 회원국들(1992~2002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은 증가해 왔다. 영국에서도 고용은 꽤나 안정적이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 투쟁 덕분에이기도 하고, 숙련 노동력을 보유해야 하는 사용자들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다.

케빈 두건은 〈새로운 자본주의?: 노동의 변화〉에서 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전달하는 완벽한 전도체라기 보다는 강력한 절연체라고 지적했다. 즉, 시장은 변화의 효과와 속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2008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고용에 미친 영향은 산술에 미친 영향보다 꽤 적었다. 사용자들은 기존에 투자해 놓은 “인적 자본” 자재를 줄이기보다는 비용을 줄이려 했다. 착취 수준을 올리고, 초과근무 수량을 줄이고,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말이다. 의료나 교육 같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부문 고용이 꽤나 꾸준히 증가해 왔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서 노조 조직률이 50퍼센트 이상 정도로 높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특권층인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 슬라보예 지젝은 2012년 초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봉급받는 부르주아지”라고 잘못 일컬었다.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화”해 왔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그랬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 보고 있고,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 형태의 천대를 받고 있고,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 형태의 투쟁과 저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불안정성에 관한 세간의 인식을 흔들 수 있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승리일 것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승리하면,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여전히 힘이 있고 조직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재편된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계속 바뀌고 또 바뀐다. 그럼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구조도 바뀐다.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정치경제학 전통이 이런 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사회주의자들 앞에 놓인 문제와 기회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극복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으며 해서는 안 된다. 계급 투쟁의 수준이 오랫동안 낮은 상황에서는, 특히 불안정성과 무기력에 관한 연사들(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흔한)을 영무세처럼 따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자신감과 전투성을 끌어올리는 데서 방해만 될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재편된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계속 바뀌고 또 바뀐다. 그럼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구조도 바뀐다.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정치경제학 전통이 이런 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현대중공업 투쟁

정병모 집행부가 이번에는 투쟁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확고히 쥐어짜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사측은 11월 10일 “임원은 최대 70퍼센트, 직원은 60퍼센트까지 연봉 격차를 뒤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성과 연봉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2월에 과장급 이상 관리자로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차별을 만들어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단결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또 전체 노동자들의 총액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이다.

이번 발표는 이미 예고된 방향 속에서 나왔다. 신임 사장 권오갑은 지난 10월 대대적인 ‘경영 혁신’을 선언하며 임원급 관리자 30퍼센트 해임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의 고삐를 쥐겠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최근 물량팀, 일당직 등 2~3차 초단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 사측이 상시적 전환배치, 정규직 대량해고 등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런 공격의 이면에는 세계 조선업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유럽연합의 경기 침체 등으로 조선업계가 심각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2조여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주주액은 올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이런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혈안이다. 따라서



11월 2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산업거부 후 열린 결의대회.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내고 기본급 인상 등 임단협 요구를 쟁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데서도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지난 7일 예고했던 2시간 파업 계획을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유보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 빅3 중 하나로,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이곳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파업을 예고한 것은 지배자들에게도 걱정거리였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쟁은 민주노

조운동도 고무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공멸” 운운하며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측은 현대중공업 파업을 하루 앞두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집행부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 노조를 고립시키려 했다.

공세

이 속에서 정병모 집행부는 상당한 압력을 받았던 듯하다. 그는 결국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를 일관되게 대변하

기보다 파업을 유보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노동자 운동의 큰 기대를 모으며 등장한 정병모 집행부도 사측과 현장조합원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타협을 중재하는 노조 관료주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파업 계획을 취소한 바로 그날,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 조합원들은 압도적 반대로 집행부의 안을 거부했다. 그래서 정병모 집행부의 갑작스런 파업 취소는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한층 실망감을 안겨 줬다.

무엇보다 노조 집행부의 파업 취소는 사측이 더한층 공세를 취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사측은 곧바로 성과 연봉제 계획을 발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맥이 풀렸다. 이후 집회 대열은 현저히 줄었다. 일부 노동자들은 집행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답답합니다. 노조가 뭐라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업할 때 언제 합법이었던 적이 있나요? 올해는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현장의 불만이 상당했기에, 정병모 집행부는 다시금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그 뒤에도 집행부는 시간을 끌어 왔지만, 노조가 다시 파업을 하겠다며 11월 20일 결의대회를 열자 대열이 4천여 명으로 다시 불어났다.

최근 노조는 11월 27일 4시간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본격적인 조직에 착수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위원장이 파업 계획을 유보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다니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꼭 성사되길 바랍니다.”

사측에 타격을 주는 파업을 하려면 원하청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만큼 지금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방어하면서 투쟁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김지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원청에게서 교섭을 위임 받은 경총은 몇 달이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오다가, 전면 파업 돌입 직전에 교섭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이 교섭안에는 노조 활동, 고용 보장 등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 다 빠져 있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안도 노동자들이 기존에 받던 임금 총액보다 훨씬 적고, 이조차도 건수를 채워야 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은 “비싼 종이에 말도 안 되는 글씨만 적어 침까지 뱉어서 우리에게 던진 꼴”이라며 분노했다.

그동안 사측은 ‘대기업의 통신 기사로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실제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에게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 왔다. 끔찍한 노동조건은 최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11월 21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공동 파업 집회.

노동자 3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LG유플러스는 아무런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탄압으로 일관했다. 지난 7개월 만에 조합 활동을 벌이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수십 명이다. 조합원들은 몇 개월째 대체인력에게 일감을 빼앗겨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세 아이의 아

빠인 한 조합원의 지난 달 월급은 단돈 43만 원이었다. 빚에 시달리다가 개인 회생까지 신청한 조합원들도 있다.

반면, 통신 대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LG유플러스 부회장 이상철은 올해 3분기까지만 18억여 원, SK텔레콤 사장 하성민은 13억여 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들이 명절에도 일해 온 노동자들의 피땀

을 행진 것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 활동 보장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제 통신 대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첫 파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단호하게 싸워서 이기겠다는 각오가 더 크다고 말한다. 탄압을 견딘 시간만큼,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분노와 기세는 높다. 전면 파업을 준비하며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있다. 노동자들의 가족들도 “반드시 이겨 달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정말 기다리던 전면 파업이다.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다. 사측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는 싸움이다. 후회 없이 끝까지 동지들과 싸워야겠다는 생각 뿐이다.”

“우리들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각오해라! 우리 노동자들이 전사가 됐

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꼭 만들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장들은 서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노동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서로에게 배우고 힘이 돼 주며 공동 투쟁을 해 왔다. 노동자들은 서로를 “쌍둥이 형제”라고 부른다. 사장들이 강요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선택한 것이다.

양대 통신사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사회적 관심도 더 커졌다. 또, 대체 인력 분산 등 파업 효과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반감이 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이런 점을 이용해 굳건히 파업을 유지한다면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진



“해고한 비정규직 1백9명 즉각 복직시켜라” 11월 12일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 옥외 전광판에서 고공농성 중인 씨앤앰 비정규직 강성덕, 임정균 동지.

씨앤앰 비정규직 고공농성, 정규직 파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이 시작되다

성지현

11월 12일 새벽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씨앤앰 대주주인 MBK 사무실 앞 전광판 위에서 해고자 1백9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올해 초부터 씨앤앰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규직에게는 임금 3퍼센트 인상(실질임금 삭감), 비정규직에게는 임금 20퍼센트 삭감을 요구했다. 매각 전 구조조정도 시사했다. 또, 6월 30일부터 하청업체 재계약을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 1백9명을 해고했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공격에 맞서 지난여름 내내 파업과 MBK 앞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에도 사측은 계속 버텼다. 결국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구를 쟁취하지 못하고 복귀했고, 해고자들은 5개월째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8일부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1백9명 복직, 구조조정 중단, 고용 보장, 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나선 정규직 노동자

는 “케비지부[씨앤앰 비정규직 노조]와 씨앤앰지부[정규직 노조]는 한 몸이다. 우리 전체 9백 명 대오 중 1백 명을 해고한 것이다. 지난여름 케비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이제 우리가 나갈 차례다” 하고 말했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임정균 동지도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1백9명 해고를 내 일처럼 여기고 투쟁하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말을 전했다.

물론, “지난여름에도 케비와 씨앤앰이 둘 다 함께 파업을 했다면, 더 빨리 MBK를 무릎 꿇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일리 있는 지적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고공농성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11월 18일에는 민주노총, 정당, 시민사회·노동운동 단체들이 MBK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도 이 투쟁을 지지하는 모임이 구성돼 MBK를 규탄하는 서명 운동 등을 하고 있다.

MBK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투쟁과 연대를 굳건히 이어 나가야 한다.

고공농성 중인 씨앤앰 비정규직 임정균 동지와의 인터뷰

“너무 절박했습니다. 특히 해고된 동지들이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MBK와 씨앤앰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고 동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올라왔습니다.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파업 투쟁을 제대로 해보자고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래 동지들과 같이 집회를 하고, 지나가는 시민들께 우리가 여기서 투쟁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손을 흔 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공간이 좁아 활동량이 적어 소화가 잘 되지 않기도 하지만, 저희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오래 버티기 위해 틈틈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째 요구는 해고자 원직 복직입니다. 또, 지금 MBK는 기업을 슬림화하고 잘 포장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해

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절대로 안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단협도 제대로 체결해야 합니다. 지난여름 2개월 넘는 직장폐쇄 동안 우리 동지들이 생활고로 매우 힘들어 했는데,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위로금도 필요합니다.

11월 18일부터 씨앤앰지부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투쟁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백9명 해고 문제는 단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케비가 무너지면 다음에는 정규직 지부에도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모든 조합원들이 단지 ‘연대’가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본받아서 이 파업 투쟁이 끝나고 나서 힘 닿는 데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독자편지

ws@wspaper.org

12월 3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의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성소수자 아들을 둔 아버지의 편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성소수자들이 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됐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사회적 힐난을 받으며 아웃팅을 두려워해야 한다.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45퍼센트 정도 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각오 없이는 너무 힘든 일이다.

과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그 대상이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나 양성이라서 말이다.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 민이는 양성애자이다. 올 4월 초에 처음 민이가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기억이 떠오른다. ‘왜 하필 내 아들이’ 하는 충격과 더불어 ‘머리로 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그간 동성에 관련 책이나 강연도 들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니 머리가 하얘지며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이후 성장해 동성과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입양해야 하는 경우도 고민해 봐야 했다. 그에 따르는 사회적 제약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자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것 앞엔 부차적이었다.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이 상황을 정말 신이 준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게 됐다.



2014년 6월 7일 ‘퀴어문화축제’에 수천 명이 참가했다.

이러한 것이 배경이 돼 이번 모 시 사회양프로그래에서 성소수자 관련 섭외를 받았다. 주위의 시선과 이후에 받을 상처를 감내하면서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없이 출연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해 갇힌 새장 속에서 문을 열고 나와 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다. 특히 성소수자가 원치 않게 커밍아웃을 당했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다.

누가 퍼 갔는지는 모르지만 페이스북이나 몇 군데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좋아요’가 5만 건이 넘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다. 댓글에서 갑

론을박이 오갈 뿐 아니라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비난과 냉대를 당해 왔는지 하는 글들도 올라 왔다. 가족들에게 버려져 정신병원에 갇히고 버랑 끝에 몰려 자신을 학대하다 마침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았다.

가족이 따뜻하게 이해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이성이 아닌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회적 힐난이나 배척,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흑인들이 인권을 쟁취하고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했듯 좋은 결과가 다가오리라 생각한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며 자식들이고 동시대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설사 그들을 싫어한다 해도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척해선 안 된다. 하루빨리 시각이 변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민이처럼 ‘용기를 내 갇혀진 새장의 문을 열고 나오라’는 말로 글을 맺는다.

권영한

※ 이 글의 전문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7호를 읽고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 신문의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그 속에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핵심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뭉쳐야 한다.” 단어로 표현하면 “단결” 혹은 “연대” 정도가 되겠죠. 사실 노동자라면 당연하다시피 지켜야 할 가치여서 오히려 잘 의식하지 못하는 이 키워드가 최근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악, 서민 증세, 복지 축소, 공공부문·의료 민영화 등을 전방위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당사자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을 정도로 말입니다.

대기업, 부자 증세 없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 전가되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공식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뭉치면 될 것인데 왜 그걸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쯤은 느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단 하나, “이간질”뿐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공무원과 비공무원,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과 유가족이 아닌 사람까지... 입장과 처지를 달리하는 조그만 부분까지도 그 차이를 극대화시켜 서로 공격하고 연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렇게 원초적이고 한심하기까지 한 전략이 아직도 잘 통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옹호 세력을 위시한 자본의 뒷받침을 기반으로 초법적인 권력을 남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나라여서일 겁니다.

연대

이번 신문의 곳곳에는 그런 공격과 논리에 우리 노동자, 서민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야별로 잘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악 저지투쟁에 전교조도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라든지, 공공기관 노동자의 연대를 강조한 것, 세월호 참사의 실상을 파헤치는 것이 곧 안전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 등이 생각납니다.

요새 노동자, 서민의 가장 큰 물음은 아마도 “과연 희망은 없는가” 일 것입니다.

웬만한 건 힘으로 밀어 버리고 뒀

어 버리는 잔인한 권력 앞에서 많은 이들이 무기력감과 패배감도 맛봤을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이라는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 현 정부가 절대 난공불락의 대상이 아니며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모두 굳건히 연대한다면 충분히 맞설 수 있다고 느낍니다.

여의도에 모인 공무원 노동자 12만 명은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는 가치 하나로도 거대한 스케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철도·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공공성 위기”, 무상보육 등과 관련된 “복지 위기”, 세월호 참사나 판교 참사 등과 연결된 “사회 안전” 같은 가치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승자박에 빠질 것이고 레임덕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덧붙여 이번 신문에도 기획됐듯, 민중의 염원을 하나로 묶어 낼 강력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탄생도 기원합니다.

허정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박근혜에 맞서 투쟁을 이끌 전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투표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이 집행부가 표독스럽게 노동자를 공격하는 박근혜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FTA 비준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조했다. 또, 다시금 의료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해 준 대법원 판결은 ‘해고는 쉽게’ 하라는 지배자들의 선언과도 같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집권했다. 그만큼 독하고 집요하게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우리의 삶을 강도질하려 한다.

이 속에서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지난 십수 년간 많은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총파업’, ‘총력 투쟁’을 외쳤다. 그러나 양보와 타협, “뺑파업”과 투쟁 회피가 잇따랐고, 이는 조합원들의 냉소와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 따라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앞장서 투쟁을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네 선본 중 단연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가 돋보인다. 한상균 후보조는 ‘투쟁하는 민주노총, 언행일치 지도부’를 내세우며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조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투쟁 사령부가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질 일자리 확대, 임금체계 개악과 최저임금 억제 등에 맞서며 당면 투쟁에서 승기를 잡아, 하반기에 파업을 조직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한 단결 투쟁 전략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각개격파 시도에 맞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단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현장의 투쟁을 방관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홀로 고립돼 싸우지 않도록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광장의 저항도 주도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지지 기반

이 같은 투쟁 강조는 ‘준비된 투쟁’을 말하며 사실상 투쟁을 회피하는 기호4번 전재환 후보 조나, 대기업 정규직 투쟁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내비치는 기호3번 허영구 후보 조 등 다른 후보들과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8, 9, 10면을 보시오)

한상균 위원장 후보는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끈 장본인이다. 쌍용차 사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쌍용차 파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민주노총의 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는 지난해 전교조의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이끌어 신뢰를 주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 투사들과 투쟁적인 조합원들이 한상균 후보조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구경북 건설노조에서 파업을 이끌고 이주노



김미영 기자

“투쟁하는 민주노총, 언행일치 지도부”를 강조하는 기호2번 한상균·이영주·최종진 후보.

동자들과의 연대를 조직한 한 활동가는 자발적으로 한상균 지지 운동에 나서며,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필요하다. 한상균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호2번에 투표하자, 선거운동하자, 재정 지원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상균 후보 조의 당선은 바로 이런 전투적 활동가들의 사기를 고무하며 강력히 싸우자는 목소리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투쟁적 지도부를 지지해야 할 핵심 이유다.

투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야

우리는 투쟁적 지도부가 당선해 공약한 대로 투쟁을 이끌기를 바란다. 현장 조합원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설 만큼 자신감이 충만하지는 않지만, 지도부가 투쟁을 공식 선언하며 확고하게 이끌려 한다는 확신을 준다면 그에 호응하고 나설 수는 있다.

일각에선 ‘현장이 죽었다’는 식의 한탄과 회의도 나오지만, 이는 적절한 진단이 아니다. 지난해 철도 파업은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며 오랜 만에 ‘노동’의 주도력을 보여 줬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총투표에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것도 노동운동에 고무적인 소식이었다.

특히 현장의 투사들이 지도부의 투쟁 계획을 활용해 실제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이 맞물려야 한다.

투쟁적 지도부의 등장에 만족하고 쳐다보기보다 기층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 자신의 투쟁과 활동이다. 이것이 알파오메가다.

좌파 지도부가 투쟁을 공식 선언할 때조차, 현장의 투쟁 조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것이 실제 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지도부가 제대로 투쟁을 이끌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김미영 기자

지난 여름 전교조는 법외노조 공격과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을 공식 결정했다.

15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MARXISM 맑시즘2015

2015년 2월 6일(금) ~ 8일(일)

장소 : 서울 | 주최 : 노동자연대

연사



조셉 추나라 (Joseph Choonara)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 저술가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영국 사회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근 경제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다. 국내 번역된 책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해설서인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맑시즘2015에서 연설할 주제:

- 오늘날 경제 위기와 회복 · 계급이란 무엇인가?
- 유럽의 정치 양극화: 극우와 급진 좌파의 등장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밖에도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와 진보적 연구자·저술가들 수십 명이 맑시즘2015에서 연설합니다.

www.marxism.or.kr

02-2271-2395 | 010-4909-2026(문자 가능) | marxism@marxism.or.kr